

상품판매 운영협의회 설치키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상품강제할당 사라질 듯



지난 4월 21일 노동조합과 사측은 노사상품판매운영협의회 설치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조합과 사측은 지난 4월 21일 자율판매 원칙과 자율판매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상품판매 대책과 이에 따른 운영기구 설치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3월 12일 사측의 전략상품 선정 요청에 대해 조합은 상품 판매 문제 해결과 이에 따른 노사상품판매 운영 기구 설치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후 실무진은 기구 설치 운영범위, 시행방법과 단말기 매출액 제외 및 위반시 불이익 부여, 상품판매 보상금 지급 등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행위 즉각 중단, 상품 자율판매(TFT)운영 해체, 단말기(노트북, PDA) 매출액 제외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해 합의의 시행했다.

조합은 회사의 매출액 안정이 고용안정이라는 인식 하에 사원판매에 필요하다고 판단했

다. 단, 기존 관행처럼 진행돼온 강제할당 등 상품 판매방법을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노사는 전략상품을 지정하고 사원들의 자율 판매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상품별 성과보상 지급 기준을 합의했다. 또한, 자율판매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변칙적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율판매 목표 설정을 감안해 책임했다.

한편 상품판매 성과보상 지급 대상에서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백화점식 상품판매에서 탈피하고 조합원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상품판매 운영협의회는 전사적인 사원판매에 필요한 전략상품을 지정하고 기관별, 현행 지역별 편차

가 극심한 상품 판매 목표에 대해서는 단일화된 자율판매 목표를 책정했다. 또한 그 기준에 대한 세부적 설정은 운영협의회에서 추후 협의키로 했다.

또한 목표할당 등과 같은 위반 사례에 대해 공동조사 및 위반당사자의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고 재발생 기관에 대해 매출액 불인정 등의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책무와 이와 별도로 조합은 처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노사합의 위반으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조합은 매출액에 단말기판매액을 포함한 것이 상품판매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2004년도 총 매출액에서 단말기를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

장제지원 확대, 상품판매 관련기구 설치 등

노동조합은 1/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상품판매사항, 장제지원확대, 보증제도 개선 등 6개사항에 대해 사측과 합의했다.

장제지원은 현행 조화 2단(10만원)을 3단(1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용품 또한 200인용에서 300인용으로 확대했다. 변경된 장제 지원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제도는 학자금 1인 보증한도 사전 설정후 설정 금액내에서 추가 대부금에 대한 보증면제하기로 했다. 특수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2년이상 도 서지역 근무자가 근무지변경을 요청할 경우 업무공백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활 근거지를 고려 재배치한다. 의료비지원은 추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상품판매관련 상설운영위원회 설치 또한 별도 운영기준 및 시행지침을 합의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상품판매 관련 자율적인 상품판매 전담팀(이하 TFT)에 대해 강제성이 확

대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TFT는 자율적인 판매에서 벗어나 전직원 80%이상참여, 각상품별 목표 부여 참여, 서명을 통한 강제 가입 등 직원들의 강제적 참여로 변질돼 노사갈등을 일으켜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상품판매 즉각 중지 및 TFT의 해체를 요구하고 비영업부서 사원들에 대한 목표부여 금지 및 일일실적과 대책보고 강요를 중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측에서 제안한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안은 과거 한국통신의 명칭을 모두 KT로 변경하고 몇몇 모호한 문구를 수정해 명확히 했다.

1/4분기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측이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측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낸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현장에 근거해 조합원들의 체증자료 및 대내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단체교섭 이렇게 해달라

2003년 단체교섭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교섭위원을 선정하고 교섭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마련됐을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준비과정을 거쳐 교섭안건을 마련했겠지만 단체교섭에 앞서 여성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몇가지 당부드립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국제전화국은 국제전화민원창구와 일반사무실 근무 여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평상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고 회사의 행사 때만 착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모든 직원에 대한 복제지급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폼이 필요하게 되면 본사로 명단을 제출해 필요한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면 합니까.

또한 현행 주택자금 대출 조건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여성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이며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직원도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한편, 현업에 여성조합원을 위한 의견수렴창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여직원 모임이 있는 지부는 활동비지원을 해주고 여직원이 없는 지부는 여직원 모임 결성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보건휴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성노동자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은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이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숙
(본사지방본부 국제지부장)

115 전보접수 운용 관련 노사합의서

지난 4월 29일 노동조합과 사측은 서울전신국은 수원과 대전 115전보접수 업무를 통합 운용하고 부산전신국은 전북, 대구, 전남 115전보접수 업무를 통합해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합운용에 따른 수원, 대전, 대구, 전남의 종사원은 현소속직사 발령 및 타기관 희망자는 희망기관으로 발령키로 했다. 정규직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115호 접수 업무만 계약직(인력)으로 위탁운영하며, 호접수 이외에 발생하는 제반업무(민원처리, 꽃배달리플, 그외 기타 업무)는 현 정규직이 총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되는 수원, 대전, 대구, 전남 115 전보접수 계약직은 고용안정을 위해 110, 100원 센터 등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부계시판 점검 우수지부...동수원지부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강남, 충남, 전남, 부산지방본부를 중심으로 지부 계시판 점검을 벌인 결과 우수 지부에 강남지방본부 동수원지부가 선정됐으며 불량지부에는 충남지방본부 본부지부가 선정됐다.

동수원지부는 노보와 일일소식지를 충실히 게시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충남지방본부 본부지부의 경우 한편의 선전물도 게시되지 않아 지부활동을 의심케 했다.

한편, 중앙본부에서 발송된 선전물 외에는 지방본부나 지부에서 별도 제작한 선전물이 없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지부계시판 점검은 지방본부위원장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지부단위 홍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본부는 매월 지방별 무작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우수지부에 선정된 동수원지부



불량지부에 선정된 충남지방본부 본부지부

이국환동지시집 발간

중앙본부 이국환 편집1국장이 20여년동안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 '박토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대소식

금속노조, 국내최초 산별교섭



금속노조와 사용자 대표들이 지난 22일 산별교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사용자가 4월 22일 제7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2003년 금속노조의 기본협약과 통일요구에 대해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해 노동역사상 최초로 산별교섭이 진행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6일부터 금속노조와 95개 회사의 대표로부터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용자 대표들은 △7기본협약의 유효기간, 자동갱신 조항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교섭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2년 금속노조는 사업장별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5개항의 산별협약(기본협약)을 제출해 160개 사업장 중에서 108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을 합의했다. 또한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조와 사용자대표들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진

행해왔다. 3월 21일에 열린 3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대표들은 '올해 단협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노조 통일요구를 중앙교섭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노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산별 중앙교섭의 성사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용자대표들은 95개 사업장의 교섭·체결권의 위임장을 제출했고, 작년에 기본협약에 합의한 사업장 중에서 교섭·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부도·폐업 등의 위임하지 않은 사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를 검토해 내부논의를 거쳐 4월 22일 중앙교섭 성사조건을 최종 합의했다. 22일 7차 노사실무위원회의 합의사항은 △1차 교섭 : 5월 6일(화) 14시, 서울 △중앙교섭일은 매주 화요일(주 1회) △노조 교섭위원 18명, 회사측 교섭위원 15명 등이며 기타 교섭 제반사항은 6일 열리는 첫 교섭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경 1년 6월을 선고받고 모두 1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단병호 위원장은 출소 직후 마중나온 가족과 포옹을 나누며 사생활을 하는 등 여유를 보였으며 환영을 나온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한편 4월 2일 밤 11시경부터 시작된 출소 환영대회에는 백기완 선생, 권영길 대표, 오세철교수 각계원로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와 민주노총 조합원 등 모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구치소 앞 주차장에서 열렸다. 단병호 위원장은 출소 직후 석방환영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오즘 정쟁반대·파병반대 투쟁으로 바쁘고 현장은 입단투로 바쁘는데 늦은 시간 환영해 줘서 고맙다"며 "나는 밖에서 여러분들이 처

절히 싸우는 동안 징역살이를 한 것뿐"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단병호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이후 노동정책과 관련한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공기업 사유화, 노동유연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 노동자 문제 등 전면적 대립지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찾기 어렵다"며 "노동운동의 본질적인 문제를 혼동해서 안되고 통일된 인식 가지고 대응하자"고 말했다. 단위원장은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폭넓은 반대 투쟁 벌여서 단 명령도 바다를 건널 수 없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위원장은 약 일주일간의 휴식기간을 가진 뒤 연맹과 지역본부 등을 순회하고 총연맹 각실국별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복귀했다.

철도노조 민영화 철회

1인승무제 철회, 인력확충 등 성공한 교섭 평가



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고려대 강당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철도노사는 20일 오전 10시40분 △철도민영화 방지철회 △의주용역화철회 △순배가 압류 철회 △인력충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합의안에 조인했다.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밝혀졌듯이 그동안 안전운행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1인 승무제를 철회하고 6월까지 1천5백명의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해고자 45명에 대해서는 7월까지 신규 채용하기로 했으며 철도해고자 복직방안으로 경력직 특채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임용령(제16조 제2항)의 개정을 해 노사 공동 추진키로 했다.지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불거졌던 손배가입류도 취하했

다.

또한 기존 철도 민영화 방침 철회하고 철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구조조정은 정부의 공사와 방침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 구조개혁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완전해결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철도노조의 교섭타결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신자유주의 경제에 근거한 정부의 방침에 쫓겨가는 계기가 됐다.

한편 중앙상징간부 및 강북, 강남, 서부, 본사 지방본부 상징간부는 지난 19일 철도노동조합과업지지 집회에 참여해 연대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단병호위원장출소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활동 시작

단병호 위원장이 지난 4월3일 0시 5분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년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단 위원장은 지난 2001년 8월2일 명동성당 농성 중 김대중 정부가 '잔여형기 종료후 석방,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자 자진출두했으나, 정부가 약속을 깨고 재구속해 결국



단병호위원장과 유력상징주대행이 열세안고있다.